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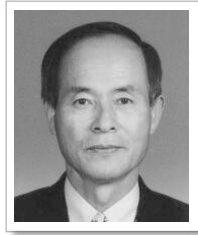
# 한국농업의 국제경쟁력 담보 위한 제언

아직까지도 비교경쟁력속에서만 갑론을박, 보다 중요한 것은 유통경쟁력  
소득감소 직접 보상제도보다 스스로 소득 만드는 근본대책이 긴급

지금 우리농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고 있는 농업개방이다. 그리고 이 농업시장의 자유개방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안 되는 분위기로 밀어붙이고 있는 힘은 세계무역기구를 주도하고 있는 다국적 농기업들의 기업경제 이데올로기이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적 철학은 효율과 비교우위론이며 이를 기초로 한 기업경제 이데올로기가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WTO가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수단으로 자유시장으로의 개방을 주도하고 있어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과 기업이 활개 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 유통과 조직경쟁력이 주요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주도하는 기업경제



정명재  
한국농업대학 학장

이데올로기의 기본 철학은 두 가지다. 「적지적작의 원리」와 「효율과 비교우위론」이다. 모든 농산물은 그가 좋아하는 기후풍토가 있어 그 기후풍토에 맞는 품목의 농사를 지으면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품질이 좋은 것을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마다 그 기후풍토에 맞는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여 팔고 다른 필요한 것은 그 돈으로 사서 쓰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은 개방되고 자유화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비교우위에 있는 농사를 중점적으로 지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본격적인 경쟁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우위론과 적지적작의 철학으로 위장된 시장 개방의 이론 뒤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 적지적작의 이론대로 농업구조가

재편될 경우 세계의 농업은 생산의 국제적 분업화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농산물 무역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농산물 유통망을 구비한 다국적 농기업들의 농산업지배와 독점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만들게 될 것이다.

농산물의 생산과 수집배송 및 가공 판매는 식품이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거나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등 특수한 유통기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냉장설비(coldchain system)를 갖춘 유통망이나 대량생산에 대비해 저장창고와 가공시설을 갖춘 수직 계열화 산업체제 구축기업들은 더욱 경쟁력을 가지게 되며 시장장악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은 하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생산적지가 있으며 따라서 생산적지를 점령하던가 아니면 그 농산물의 수집배송체제를 장악하게 되면 공급의 독점권을 장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무역량이 증대할수록 큰 이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지금 다국적 농기업들은 WTO를 통한 농산물시장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생산지원 정책까지도 협상대상으로 끌어들여 농산물생산의 국제적 분업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급자족적 농업생산보다는 분업적 생산이 보다 많은 무역량을 유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농산물시장에서 유통망을 갖추고 진출한 농산업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농산물 유통산업에는

관심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직까지도 국내생산과 상대국의 생산능력, 가격과 품질 등 비교경쟁력의 울타리 속에서 서만 문제의 해답을 구하고자 갑론을박하고 있는 셈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유통경쟁력이다. 유통을 빼앗기면 모두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통경쟁력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선은 국내의 생산시장과 소비시장을 연결하는 수집 배송체계만이라도 다국적 기업들의 손으로 넘겨주지 않도록 서둘러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무역으로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농업문제는 심각하지만 물러설 수도 없는 단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렇다면 아무리 반발하고 시간을 끌어도 언젠가는 모든 농산물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도 줄여 자유시장으로 열어 주어야 한다. 우리도 농업을 살려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막을 수도 없고 탈퇴할 수도 없는 WTO라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안이다. WTO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시장의 관세 없는 자유개방이 잘만 이용하면 우리에게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농산물시장은 좁다. 그래서 매년 어느 해의 고추 값이 좋으면 다음해에는 고추 생산이 늘어 가격이 폭락하고 기상변동이 심해 흉작인 해의 가격은 뛰는데 풍작인 해에는 생산비도 못 건지게 된다. 그러나 이제 중국시장이 열리고 일본이 열리고, 유럽과 미국의 시장이 열리면 보다 큰 시장에서

팔려나갈 수 있는 물건만 만들어 내면 풍흉에 관계없이 돈 벌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계시장으로 진출시킬 수 있는 농산물만 만들면 가격 폭락으로 생산비를 못 건지게 되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농산물도 세계시장으로, 중국과 일본으로 팔려나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보다 중요한 것이 품질 경쟁력이라고 했다. 품질은 기술의 뒷받침을 받아야 하며, 우리 농민들의 농사 기술이라면 경쟁에서 뒤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품질이 좋아도 알려져야 하고 그것에 신뢰도가 있어야 하며, 원하는 소비자에게 즉시 공급이 가능한 유통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이 유통경쟁력은 조직적인 활동으로만 구축될 수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조직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경쟁력을 갖추고 품질 좋은 농산물로 시장을 개척해 나아간다면 농산물은 품질에 의해 그리고 신뢰도에 의해 소비되므로 얼마든지 좋은 시장이 개척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일본의 고급시장을 지척에 두고 있으며, 이들 나라의 고급수요층의 우리나라 고급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를 잘 지켜나가면서 시장을 개척한다면 중국의 고급수요층 1억 인구와 일본의 고급수요층 1억이 모두 우리의 시장이 될 수 있다. 우리농산물은 중국과 일본의 큰 시장을 지척에 두고 있어 가장 유리하며

FTA를 잘 활용하면 효자 산업이 될 수 있다.

### 농가소득 보장대책 강구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시장개방의 속도가 가해지면서 우리나라의 농업도 이제 세계화된 시장 속으로 경쟁의 대열에 들어섰다. 그래서 우리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 구조개선 정책과 품질 고급화 등 여러 가지 투자정책들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호당 농지규모가 적고 토지용역비와 자재비 등 생산비가 높게 들어서 가격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렵고 품종개량이나 기능성, 환경농산물 등을 통한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농산물시장이 관세도 없이 완전개방될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품질 좋은 농산물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품질이 좋다는 것은 농산물의 경우 쉽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나 유통망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농산물과 식품은 신뢰도가 있는 브랜드와 필요한때에 즉시 공급받을 수 있는 유통시스템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격경쟁력보다도 중요한 것은 품질경쟁력이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통경쟁력이라고 한다.

이제는 WTO의 주도로 모든 회원국들의 모든 농산물시장이 관세도 없는 자유시장으로 개방 될 것이므로 모든 나라가 똑같은 어

려움에 처하게 될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들 회원국들은 농업을 살려내기 위해 모두들 가격경쟁에 품질경쟁과 유통경쟁력을 높이며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시장으로 진출시켜도 그 가격은 현재의 국제가격보다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가는 품종개량에 환경 유기농업을 하더라도 농산물시장이 완전개방 될 경우 생산에서 얻을 수 있는 농업소득은 현재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가격의 하락은 농가소득의 감소로 직결되고 이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농가는 유지되기 어렵게 된다. 농업생산력이나 경영규모의 경쟁력이 낮은 나라에서는 농산물의 시장개방에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이것 때문이다.

농가의 소득보장은 농업의 시장개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아무리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 수출이 되더라도 그 가격이 현재의 가격보다는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개방의 경험을 가지고 그 대책을 잘 정비한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 특히 독일은 프랑스의 농업과 경쟁이 못되므로 농정의 방향을 “적정농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수의 농가유지”로 정하고 농가가 유지되도록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은 스스로 가공하거나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을 올리게 한 것이다.

농민들이 농산물 생산에서 얻는 소득보다는 이를 가공하거나 저장하고 소비자와 직거래하는데서 얻는 부가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가가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접 가공, 저장, 유통시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독일은 모든 농민들을 생산 품목별로 협동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품목별 협동조합 육성정책을 지원했으며 이들이 품목별 협동을 통해 가공사업과 저장, 유통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해왔던 것이다. 그 결과 독일의 농민들은 모든 농업협동조합들이 품목별로 만들어져 조합단위에서 가공이 가능한 것들은 모두 가공하고 도시의 소비조합들과 직거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소규모 조합들이 생산해내는 상품들이 다양하고 특성을 가지는 소위 “소량 다품목 고품질”로서 고급수요층을 겨냥한 시장전략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시장 협정과 국제개방과정에서 농가의 소득감소를 직접 보상하는 보상제도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장기적으로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피해를 보상하여 충격을 줄여 주어야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들이 가능한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내는 보다 근본적인 소득보장대책의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 Y